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일시 | 2020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목차

목차	3
루스벨트의 ‘뉴딜’에는 있고 문재인 ‘한국판 뉴딜’에는 없는 것 :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판 뉴딜	5
1. 뉴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5
2.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 전환인가?	7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9
4. 정리	11
복지 분야 평가	12
1. 들어가며	12
2.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12
3. 복지정책 및 제도의 맥락에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13
보건의료 분야 평가	15
1.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안이 나와야 함	15
2. 공공의료확충이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 뉴딜’은 기만임	16
3. 공공의료 재벌기업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이 ‘한국형 뉴딜’이 될 수 없음	18
노동·일자리 분야 평가	21
1.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	21
2. 노동없는 뉴딜 정책	21

프로그램

- 10:00 사회 변혜진_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 10:10 발표1 정부와 한국판 뉴딜 전반적 평가
 윤홍식_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0:20 발표2 복지 분야 평가
 김진석_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0:30 발표3 보건 분야 평가
 전진한_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10:40 발표4 노동·일자리 분야 평가
 박용석_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10:50 질의응답

루스벨트의 ‘뉴딜’에는 있고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에는 없는 것 :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판 뉴딜

윤홍식_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보수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함.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한적인 실업부조(취업지원제도)의 도입, 특고를 포함한 고용보험의 보편적 확대(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시범사업)의 제도화 계획 등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누적된,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뉴딜을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 것 또한 분명해 보임. 발제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문제를 개략적으로 지적함.

1. 뉴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먼저 ‘뉴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 필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뉴딜을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나, 테네시계곡 사업과 같은 재정정책과 일자리 확충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뉴딜을 일개 프로그램으로 격하시키는 것임.

1)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뉴딜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

- 첫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1930년대 뉴딜이 시작되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방임주의가 지배적인 체제였고, 이러한 자유방임주의가 1929년 대공황을 유발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폴라니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회로부터 탈착근된 시장의 확대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던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통제, 즉, 국가가 개입해 시장이 사회에 착근된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뉴딜의 핵심 목표였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규율한다는 것은 뉴딜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즉, 이중운동으로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뉴딜을 위기에 직면한 사회를 구하는 민주주의에 착근된 대안(복지국가)로 이해한다면, 그 핵심은 민주주의에 착근된 뉴딜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뉴딜을 통해 미국의 민주당은 뉴딜연합을 형성하고, 이후 민주당의 장기집권, 미국에서 진보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됨. 당시 경제위기로 가장 고통 받는 집단의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고, 정치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그너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법이었고, 이후 노조활동이 합법화 됨. (문제는 여기서 소수자, 흑인을 배제하는 인종차별주의 뉴딜연합은 이후 미국 사회의 연대를 저해하는 근본적 문제를 양태 함).
- 마지막으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에게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일자리의 창출임.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일자리의 창출은 뉴딜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것도 아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뉴딜의 일자리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었음. 더욱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완전고용을 달성해 자유방임주의가 유발한 위기에 가장 잘 대응했던 대안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뉴딜이 아니라 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였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음. 1930년 미국과 독일의 실업률은 각각 14.2%와 22.7%로 독일의 실업률이 월등히 높았지만, 1938년이 되면 미국은 27.9%로 높아졌지만, 독일은 3.2%로 낮아졌고, 1939년이 되면 0.3%로 완전고용을 실현했음.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도, 스탈린의 소련도 완전고용을 달성했음.
- 이를 종합하면 뉴딜이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대안을 의미하며, 그 성과 또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착근된 뉴딜이었고, 이는 제2차 대전이후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를 알리는 출발점이었음.

2)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정치경제적 성격

- 단기적 위기가 아님. 누적된 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폭발한 것임. 위기가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위기라면, 이에 대응해 중장기적 전환을 내오는 개혁과제가 제시되어야 함.
- 세계 자본주의의 기조 전환의 가속화(인플레이션과 균형재정에서 고용과 임금/소득 보장으로).
-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슬로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수출주도 성장체제의 위기.
- 저성장 기조로 전환(개도국의 타격).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위기 하에서 진행.
- 권력자원의 문제(위기 이후 불평등 강화 vs. 약화).

- 국가의 강화.
- 자본주의의 패권변화.

2.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 전환인가?

1) 문재인 정부의 뉴딜

- 디지털 뉴딜,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개발국가의 산업정책(박정희 정권 이래 지속되온 개발정책) 그린 뉴딜, 이 또한 개발국가의 산업정책이라는 틀로 접근.
-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을 기초로 녹색을 그린으로 명칭을 바꾼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 뉴딜은 박근혜 정부의 'ICT기본계획 비전, ICT를 통한 창조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확장하고 업데이트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수정부와 자유주의 정부(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을 연속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임. 보수정부와 자유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전국민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등은 보수정부와 비교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에선 얻은 교훈은 시장에서 시민에게 안정적 고용을 보장해주지 못했을 때, 복지확대가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임.
-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임.

2) 한국판 뉴딜, 뉴딜인가?

- 앞서 검토한 내용에 기초하면 한국판 뉴딜을 뉴딜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첫째,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있지 않음. 문재인 정부도 이전 보수정부와 같이 재정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 즉, 기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았음.
- 만약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들어 이전 정부와는 상이하고 주장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 또한 2008년 위기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음.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과 재정균형을 강조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음.

-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현재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
- IMF, 세계은행 등 이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기조를 인플레이션과 균형재정에서 고용과 임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상, Goal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통해 성장을 계속하는 체제를 그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시민이 정부와 함께 추구해야할 사회적 목표가 부재함.
- 한국의 문제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성장방식을 통한 성장이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심화시켰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문제는 첨단 자동화 장비를 설치해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서 조립 생산하는 수출지향의 거대 기업과 낮은 노동생산성에 기초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중소기업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것임.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바로 이러한 경제구조와 맞물려 있음.
- 그러나 「한국판 뉴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보이지 않고, 디지털과 그린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국가지원(산업정책)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만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판 뉴딜」이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과거의 패러다임의 지속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임. 패러다임의 전환을 희망한다면, ‘대기업 재벌 조립형 수출주도 중심의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 수출과 대내수의 균형’이라는 성장전략이 담겨 있어야 함. 「한국판 뉴딜」은 현재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확대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음.
-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총요소생산성’ 즉 혁신의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는 한국의 성장체제의 변혁 없이는 개선하기 어려움.
- 셋째, 뉴딜의 핵심인 시장을 다시 사회의 통제아래 두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장을 위한 대안이 부재함. 정치적 기반이 반드시 노동계급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 지향하는 목표를 지지하고 함께할 정치적 지지집단의 조직화·세력화 없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
-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인지,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맞는 새로운 노동자성을 어떻게 재정의 할 것인지 등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내야 하는 정치적 연대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고 보임. 정책은 좋은 프로그램의 선택이 아니라 정치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과 고용문제도 또한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판 뉴딜 구성에서 전국민사회보장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전국민고용보험(기존 고용관계에 기초한)이라는 단일 프로그램, 그것도 점진적인 확대에 기초한 사회보장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위기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임.
- 또한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기업규모에 따라 양극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기본 상식에 기초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단기적 일자리 창출)으로 일관하고 있음.
- 제대로 된 대응은 왜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구조, 성장체제의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등과 같은 고민이 담겨있지 않음.
- 종합하면 한국판 뉴딜은 개발국가의 산업정책이라는 한국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산업정책, 성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물론 성장정책과 산업정책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님. 문제는 현재와 같이 위기 국면에 대응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개발국가의 정책을 답습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

-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가깝게는 1997년 IMF 위기 이후부터 멀게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부터 누적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위기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부터 드러난 것임. 코로나19는 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임.
-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위기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위기는 첫째,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조립형 수출주도성장체제의 결과임. 재벌대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최첨단 설비를 사용한 자동화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숙련의 필요를 낮추어,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제약하고, 나쁜 일자리를 확대함.
- 둘째, 이러한 산업구조, 성장체제의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성장이 사회에 착근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힘의 부재,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사회위기가 심화되는 데도 이를 수정할 수 없었던 근본적 원인임.

- 셋째,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공적 사회보장제도 보다는 낮은 세금에 기초해 중산층 이상에서 사적 자산축적으로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신한 것도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확대를 가로막은 핵심적 장애였음.

2) 어디로 가야하나?

-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제의 구축.
- 정치적으로는 전통적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개혁을 위한 권력자원의 확대.

<복지영역>

- 사회로부터 탈락근된 시장을 복원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님. 1930년대를 생각해 보기 바람.
- 첫째, 단기적 위기 대응, 둘째, 정책기조의 전환, 셋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로부터 탈락근된 복지국가의 출현(반자유주의, 권위주의 복지국가), 넷째, 복지국가의 현대적 복원(민주주의의 급진화).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보편적 보장과 사회보험의 보편성 확대가 동시에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주기에 따른 보편적 수당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영역,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득기반형 사회보험의 제도화,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필요가 함. 특히 복지영역에서 모든 시민을 사회보험은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해야하고, 이는 곧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을 기여금에서 조세로 전환하는 획기적 변화를 의미함.
-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이 마치 대립적인 제도처럼 논의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 현재 정치권이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환적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학적특성에 따라 20~30만원씩 지급되는 전환적 기본소득은 보편적 사회수당제도와 현실적으로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음. 물론 그 지향점이 다르지만, 당분간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환적 기본소득이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전단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결국 그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증의 문제임.

- 반면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촉발된 사회보험제도는 빈곤예방이나 기본생활의 유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비례형 사회보장제도임. 그럼으로 이러한 목적의 제도는 부분기본소득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제도의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음.
-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일인당 20~30만원 수준의 전환적 기본소득을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하고, 여기에 사회보장세(조세)로 운영되는 전국민사회보험을 제도화함으로써 기본생활과 생활수준 유지를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2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정리

- 뉴딜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뉴딜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핵심은 정치적 자원을 확대하는 것임.
- 경제사회적 개혁은 이러한 정치적 기반의 확대에 기초했을 때 가능함.
- 또한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는 사회지출을 확대한다고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 1차 분배의 제도적 변화 없이 2차 분배만으로 문제를 완화할 수는 없음. 1997년 IMF 위기 이후, 1980년대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면 사회지출 확대만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음.
- 더불어 자유주의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 번 시장주의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기억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은 다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김진석_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 정부가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 7/14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책 영역별로 디지털 뉴딜 12개 과제, 그린 뉴딜 8개 과제, 그리고 안전망 강화 8개 과제 등 총 28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이들 주요 목표의 구성은 병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산업과 경제의 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산업 및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실업불안, 소득격차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안전망 강화’를 동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앞서 언급한 한국형 뉴딜의 주요 목표와 정책 방향들 가운데 복지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은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망 강화 영역에 집약되어 있음.

2.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 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한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결국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투자’로 요약될 수 있음.

- 안전망 강화 영역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안전망 강화				
합 계		10.8	26.6	33.9
1. 고용사회 안전망	소 계	9.3	22.6	15.9
	㉑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8	3.2	-
	㉒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4.3	10.4	-
	㉓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3.0	7.2	3.9
	㉔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0.9	1.2	11.8
	㉕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3	0.6	0.2
2. 사람투자	소 계	1.5	4.0	18.0
	㉖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0.5	1.1	2.5*
	㉗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0.6	2.3	12.6*
	㉘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4	0.6	2.9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총 160.0조 (국비 114.1조) 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안전망 강화 영역에 28.4조(26.6조) 원(17.8%)을 투입하고, 각 영역별 창출되는 일자리의 경우 총 190.1만 개 가운데 33.9만 개(17.8%) 일자리를 안전망 강화 영역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안전망 강화 영역 28.4조 원 가운데 24.0조(22.6조) 원(83.5%)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나머지 4.4조(4.0조) 원이 사람투자에 투입될 예정임.

3. 복지정책 및 제도의 맥락에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 첫째, 안전망 강화 과제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1차 분배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복지국가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인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정책들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 기초생계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함.
- 또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상병수당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유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나, 상병수당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러움.
- 이와 같은 우려는 한국형 뉴딜 추진체계에 복지관련 의제의 추진을 책임질 단위가 부재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음. 실제 안전망 강화 관련 과제는 고용부장관이 책임지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추진체계에 등장하지 않고 있음.

- 둘째,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과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은 특히 우려스러움.
- 산업 및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돌봄 공백 등 가중되는 신사회적 위험은 상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의 과제는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음.
- 특히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의료, 돌봄 등의 영역에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은 안전망 강화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차원에서도 관건적인 요소라는 점이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음.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및 공공인력 확대, 지자체 중심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담보상태에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동력의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움.
- 셋째,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의 과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
-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19년 1,367만에서 2025년 2,10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6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것으로 보임.
-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상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28개의 한국판 뉴딜 정책 과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0대 대표 과제에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안이 나와야 함

<정부발표자료 하 :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021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2022년)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1) 문제점

- 코로나19시기에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침을 당장 지킬 수 있도록 아플때도 소득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아프면 며칠간은 쉬면서 수동감시를 하라고 하면서, 소득을 전혀 보존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방역방침과도 모순됨. 이는 즉각적이고 당장 해야 하는 대책임.
- 더구나 한국은 OECD 국가중 상병수당이 없는 4개국(미국,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 중 하나임. 때문에 ILO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10년전부터 상병수당의 즉각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법정 유급병가도 없는 국가도 한국과 미국이 유일함. 심지어 미국도 주 정부별로 법정 유급병가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현재 13개 주와 콜롬비아DC, 20개 도시와 3개 카운티에서 법제화), 기존 국가들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기존 상병급여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음.

2) 긴급과제

- 우선 급한대로 모든 노동자에게 7일내외의 단기 ‘유급병가’를 먼저 도입해야 함. 재원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등의 기금의 재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또한 당장 도입되는 단기유급병가는 진단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함. 진단서 생략은 병원 방문시 코로나 19 전파와 병원의 폐쇄를 막기 위해서 필수적임.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유급병가’도 연간 7일내외로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예산도 집행할 필요가 있음.

3) 한국형뉴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근로기준법등에 최소 일주일이상의 ‘유급병가’를 명문화하는 작업도 필요함.(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493개 민간기업(상시 노동자 10명 이상)의 취업규칙(2018년 기준)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함) 현재 근로기준법등에 아파도 쉴 수 있는 근로계약의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아파도 해고 및 불이익으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유급이든 무급이든 병가를 취업규칙에 명시한 기업도 57.8%로 절반임).
-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등도 당장 시행되어야 하며, 연구용역 기간도 올해내로 한정해야 함. 그리고 현재 시행령(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올해말까지는 도입해야 함(국회입법과제가 아니라 현금급여의 항목으로 당장 도입 가능함).
- ‘상병수당’은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간의 국고지원 미납금등을 고려하면 낮은수준에서 집행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임.(정부가 그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매년 1조 원~2조 원 누락해왔다는 것이 더 문제임).

4) 결론

- 따라서 이번 ‘한국판뉴딜종합계획’에 밝힌 ‘상병수당 도입 로드맵’은 도입시기도 너무 늦을 뿐더러 구체적이지도 않고, 시범사업조차 ‘저소득층’ 등 잔여적복지모델로 설계되어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도입의 시급함에 견주어볼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2. 공공의료확충이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뉴딜’은 기만임.

1) 문제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100명이하로 발생함에도 벌써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대전, 광주 등 지자체별로 포화상태인 곳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2차 유행사태’는 미국이나 전지구적 상황으로 보았을때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이런 클러스터 발생이 현실이 될때를 대비해야 됨은 상식이라 할 수 있음.
- 지난 2월중순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전체 확진자치료의 77% 가량을 공공병상에서 수행했음. 또한 코로나19환자 진료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대구경북에서 1분기 초과사망자가 900여명 이상 나왔다는 역학적 보고가 있었음.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뿐 아니라, 여타 질환진료를 원할히 할

수 있는 잔여병상확보와 의료인력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중 하나임.

- 한국은 **OECD** 국가중 인구당 의사 수뿐 아니라 간호사 수(병상당 **OECD** 평균의 **20%**수준)까지 부족함. 특히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실제 호흡기환자 진료, 중환자진료에 숙련된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었음.
-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 비중의 부족(기관수로 전체의 **5%** 수준) 뿐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하여, 공공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0**개이며 종합병원 이상이 **66**개, 이중 상급종합병원인 국립대 병원을 빼면 대체로 전체 지자체 **236**개의 **1/4**에 **1**개에도 못 미치는 **55**개 정도에만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실정임.

2) 긴급과제

- 2차유행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이러한 확충과정에서 중환자실을 지역별로 분배하여 **200**병상 이상 확보하여야 함.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지금부터 재난중환자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며(서울대병원의 재난 중환자실 확충(DICU Disaster ICU)이 모범적인 준비의 사례 중 일부).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응급실을 개조하는 방법 등으로 확충하도록 해야 함.
- 긴급한 경우 정부가 중환자실과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함. 이 경우 추가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훈련을 위해서는 경력간호사의 최소 **8**주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함. 코로나 **19** 2차유행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의 대폭확충을 위한 유휴간호인력의 확보, 민간병원의 간호인력의 차출 등으로 늘어날 공공병상 간호인력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함.

3) 한국형뉴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우선 **OECD** 평균 수준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의 **25%** 수준으로는 상향될 필요가 있음. 우선 최소한 **20%**까지는 공공병상 비율을 늘려야 하며, 지역 사정등 구체적 상황에 맞춰 민간병원을 매입, 수용하거나, 기존 공공병원의 병상 증설, 그리고 병상이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하는 등의 복합적 방법을 통해 당장 공공병상을 마련해야 함.
- 국립중앙의료원등을 필두로 하여 치료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며, 방역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있듯이 ‘공공보건의료청’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교육, 응급, 외상등의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로드맵에 제시되어야 함.
- 응급, 외상, 중환자진료 등은 병상 당 간호인력의 수를 확대하고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함. 필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시 이들 필수 의료병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병상전환을 불허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또한 코로나19 시기 중환자진료가 가능한 숙련간호 인력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자산이기도 함으로 이들에 대해 경력관리 및 국가등록 등의 방식을 통해 감염병 재유행등 환자가 폭증할 시기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장기적으로 숙련간호 인력의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활동간호사가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숙련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결론

- ‘뉴딜’ 이라 함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도약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투자등을 일컫는 것임. 당연히 코로나19시대에 화두중 하나는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대응능력 강화임. 그리고 그 중심은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료컨트롤타워의 설립일 것임. 그러나 이번 ‘한국형뉴딜종합계획’에는 단 한줄도 이런 언급이 없음.
- 또한 ‘뉴딜’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더더구나 인력중심의 공공병원확충이 가장 좋은 공공인프라임에도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번 발표가 ‘뉴딜’이란 제목과는 다른 엉뚱한 계획임을 방증하게 하고 있음. 정부는 즉각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자금을 투입하여야함. ‘덕분에 챌린지’가 아니라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3. 공공의료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이 ‘한국형 뉴딜’이 될 수 없음

<정부발표자료 하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안전진료)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건강관리) 12만명 대상 l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질환 관리>

1) 문제점

- 보건의료부분에서 그나마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은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연구과제나 혁신과제들임. 또한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음.
- 스마트병원은 KT, 현대로보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NHN 같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일종의 ‘병원자동화’ 과정의 일부일 뿐임. 문제는 이런 디지털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 중요한 점임. 또 협진이 가능한 기술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주요 거점병원에 특정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우선순위에 필요함. 인력충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디지털감시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뉴딜’이 아니라 효율화일 뿐임. 설사 ‘병원자동화’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한 평가 이후에 환자들의 편익과 의료의 질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하에서 도입하는 것이 옳음.

- 취약계층에게 IoT 센서나 말벗용 AI스피커, 웨어러블 기기를 나눠준다는 사업도 일차보건의료체계 확립과 방문진료 활성화,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효과도 불분명한 비대면서비스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이에 국민세금을 붓는 것은 기업돈벌이 시켜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
- AI진단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발표되었음.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을 AI로 정밀진단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가능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바 없음. 정부가 이번에 밝힌 ‘닥터앤서2.0’ 지원 계획(1.0에 2018-2020년 364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음)은 세브란스, 서울아산, 한양대 같은 대형병원과 삼성화재-강북삼성병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휴레이포지티브 등 기업들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구사업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없이 지원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2) 긴급과제

-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등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체계를 위해 환자등록제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방문진료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즉각 도입해야 함. 독거노인등에 대한 긴급돌봄지원서비스 등이 도입되어야 함. 그리고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

3) 한국형뉴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한국형뉴딜’은 산업계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확대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함. 한국은 현재 사회서비스인력이 부족하여,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력이 큰 나라임.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공공책임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 4개의 광역지자체세만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속히 설립하고,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함.
-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근거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 필수적인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등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4) 결론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자동화’병원디지털화’ 같은 기술발전과 기업배불리기가 아니고 병원의 공공성확대, 보건의료인력 확대임. 또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독거노인등에게도 웨어러블장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중심의 ‘뉴딜’이 되어야 함.
- 또한 스마트병원,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의 비대면진료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충분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될때까지는 연구과제로 정부의 R&D사업중 하나로 지원하는 것이 맞음. 이는 대국민 선전용 ‘뉴딜’의 가치도 없음.

박용석_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1.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

문재인정부가 5월7일 1차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이후, 7월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목표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1만개를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성장 동력의 확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뉴딜 정책 방향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7월14일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뉴딜’의 정책에 필요한 요소들을 거의 담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성장 정책이 또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 아닌가 의문시된다.

과거 1930년대 뉴딜 정책이 담보했던 핵심 요소(△금융 규제 △농업 보호 △공공일자리 확대 △사회보장 확대 △노동권 보호 등)의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한국판’이란 수식어 속에 시대착오적인 발상(공공데이터·의료 등의 규제 완화 요소 등)을 담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350만개 일자리 창출의 목표 하에 발표했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2008.8), 박근혜정부가 238만개 일자리 창출(고용률 70% 달성) 목표 하에 발표했던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서비스 활성화 방안’(2013.7)과 이번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유사한 경제 패러다임이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없는 일자리’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이다. 특히, 뉴딜 정책을 내세우면서 ‘노동없는 뉴딜’ 발상에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들보다 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2. 노동없는 뉴딜 정책

1) 구체성·책임성이 없는 일자리 정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뉴딜(90.3만개) △그린 뉴딜(65.9만개) △안전망 강화(33.9만개) 분야에 각각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적시되어 있으나, 각 정책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서,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및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대체로 유사한 추진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결국 정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 환경 조성(예, 규제 완화)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정부 스스로 책임있는 일자리(‘모범 사용자’로서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전망 강화’ 부분 중 거의 유일하게 정책과제와 일자리 창출 목표가 구체화된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일자리(11.8만개)는 이미 저임금·단시간 논란이 제기된 정책(월 180만원, 최대 6개월, 4.22. 고용안정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 위기 충격이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 의료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OECD 평균수준의 1/3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를 제시(2017.10.「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했고, 이 중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인력확충(보건 의료·생활안전·재난방지·검역 등 포함 6~8만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문재인정부는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정책은 거의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시급한 과제(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공공 의료 인력 확대 등)조차 이번 정책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다.

2) 경제환경 변화시 요구되는 노동정책 외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제시된 내용의 구체적 정책과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디지털·그린뉴딜의 정책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일부 포장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먼저,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확대가 불투명(고용 전속성이 애매한 플랫폼 노동자 배제 등)한 상태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취지가 무색하고, 실업부조 등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정작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고용 위기 상황(휴·폐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직업 전환 및 새로운 작업 환경 등의 노동시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적역량 획기적 제고”만이 언급될 뿐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기업 단위 또는 초기업 단위 노동관계 대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디지털·그린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 단위 내 배치 전환 및 신기술 적응을 위한 노사간 교섭·협의 또는 노동조건 결정 공동 체계, 그리고 초기업 단위의 구조조정 예방 및 노동조건 조정 등을 위한 교섭구조 등을 이번 정책에서는 처음부터 정책과제로 검토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뉴딜 정책의 핵심이 경제상황의 급변에 대비한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일명 Wagner법)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3) 정책 결함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정부 역주행의 계기

일자리 정책의 한계 및 노동정책 속에서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결국 ‘노동없는 뉴딜’로서, 결과적으로 뉴딜(New Deal)의 기본 전제조차 충족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전제로 작용한 ‘한국판’이 지난 시절 노동배제·억압·기피가 지배질서로 작용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단지 정책적 결함 문제를 넘어 문재인정부 역주행(노동 존중 역행)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자설명회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발행일 2020. 07. 20.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abtax@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